자연보존 144 : 34-38 ; 2008년 12월

회원투고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인식도 조사(2차) 결과

편집주

조사 목적

만13세 이상 일반국민과 16개 광역자치단체, 230개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및 대기오염 관련 정책담당자 및 종업원 20명 이상의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계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조사하여 향후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전체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일반인:2007년 12월 현재 만 13세 이상 전국민상

지자체:16개 광역자치단체, 230개 기초자치단체 단체 대기오염 관련 정책 담당자

산업계:종업원 20명 이상인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의 관리자급 이상

2. 조사방법

일반인: 구조화된 질문지 및 숙련된 면접원에 의한「전화면접조사 방법」(Telephone Interview)

지자체 및 산업계: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전화면접조사 방법」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 Fax, E-mail 조사 병행

3. 유효표본

일반인: 총 1,040명(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04%p)

지자체: 총 134개(전체 246개의 54.5%)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9%p)

산업계: 총 500개(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4.3%p)

4. 조사시기

일반인: 2008년 1월 15일~2008년 1월 18일

지자체 및 산업계: 2008년 1월 14일~2008년 1월 25일

5. 조사기관: (주)월드리서치

조사결과 요약

1.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인식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만 13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97.2%),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정책담당자 전원(100.0%),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등 산업계

1)The Second Results of Opinion Poll Survey for Climate Change

관리자의 거의 대부분(99.4%)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1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인지도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인지도는 산업계가 가장 낮았음.

일반국민(90.5%) > 지자체(90.3%) > 산업계(88.6%)

1.2 지구 온난화 관련 영화 관람 여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영화를 봤거나 볼 계획은 일반국민이 가장 낮았음.

지자체(97.7%) > 산업계(77.6%) > 일반국민(68.7%)

1.3 지구 온난화 현상 인지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현상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이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특히 일반국민과 산업계의 경우 '황사발생 일수 증가'와 '한류성 어종 감소, 열대성 어류 증가'에 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황사발생 일수 증가" : 지자체(100.0%) > 산업계(95.4%) > 일반국민(88.7%)

"한류성 어종 감소, 열대성 어류 증가" : 지자체(99.3%) > 산업계(95.2%) > 일반국민(87.7%)

1.4 지구 온난화 발생원인 인지도

지구 온난화 발생원인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이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특히 '과용되는 질소 비료의 여분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와 '축산폐수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과용되는 질소비료의 여분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 지자체(88.1%) > 산업계(77.2%) > 일반국민(59.1%)

"축산폐수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 : 지자체 (90.3%) > 산업계 (81.8%) > 일반국민 (74.8%)

1.5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인지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국민이 가장 낮았으며, 특히 지자체의 경우 '자세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53.7%로 조사됨.

지자체(99.3%) > 산업계(79.4%) > 일반국민(60.9%)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지연 및 감소시키기 위해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96.3%)을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후변화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26.1%)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지방자치단체 10개 중 9개 이상(91.8%)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산업계의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물가상승'(81.6%)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실업률 증가'(65.8%)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2. 지구 온난화 방지 관련 인식

2.1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생활 실천 여부

일반국민에게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생활 실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실천하는 비율이 88.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재활용되는 상품 먼저 구입'(63.3%)을 실천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2.2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인식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수준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선진국에 준

하는 수준의 감축 의무를 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반면, 산업계에서는 약간 낮은 수준의 감축 의무를 질 것이라는 예상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OECD 국가로서 선진국에 준하는 감축 의무를 질 것" : 지자체(47.8%) > 산업계(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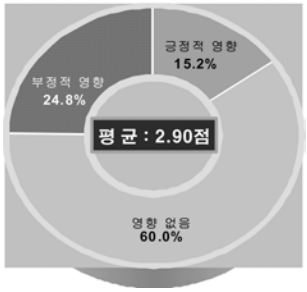
"OECD 국가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의 감축 의무를 질 것" : 지자체(45.5%) > 산업계(38.2%)

2.3 이산화탄소 배출감출 프로그램 보유 여부

산업계의 86.4%가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제품 수출시 선진국의 강화된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64.7%)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됨(Base=6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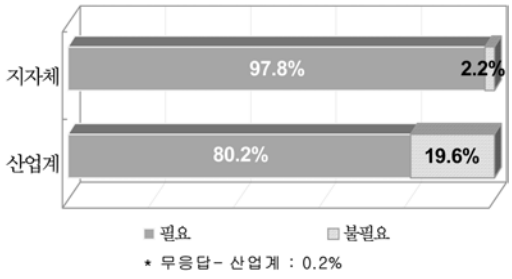
2.4 온실가스 감축의무 발생 시 기업에 미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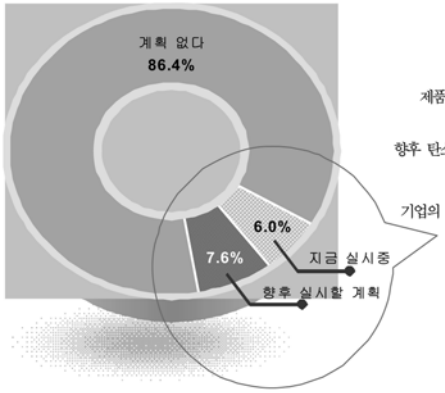
전체 기업계의 과반수이상(60.0%)이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에 '영향없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이산화탄소 감축의무국 지정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부정적 영향'은 24.6%, '긍정적 영향'은 15.2%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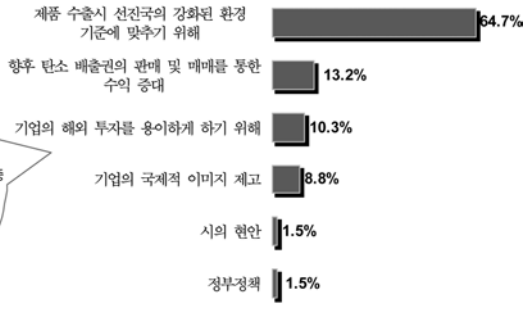


2.5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기업의 대응 필요성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지자체 및 기업의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폭 넓게 형성되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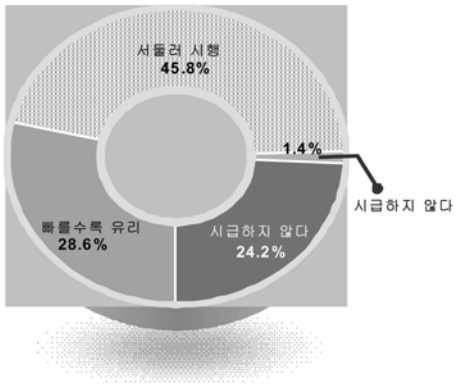




2.6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기업의 대응시기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시기는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5.8%로 가장 많았음.

>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시기는 '서둘러 시행' 해야 한다는 의견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28.6%), '시급하지 않다'(2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2.7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별로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체 에너지 개발·보급" : 산업계(48.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지자체(47.8%)
"에너지 절약 정책 강화" : 일반국민(36.8%)

2.8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지자체와 산업계의 의견은 비슷한 반면, 일반국민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음.

"걷기·자전거 타기 등 좋은 도시 기반 구축" : 일반국민(37.1%)
"공공기반 시설 및 신·증축 건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 지자체(28.4%) > 산업계(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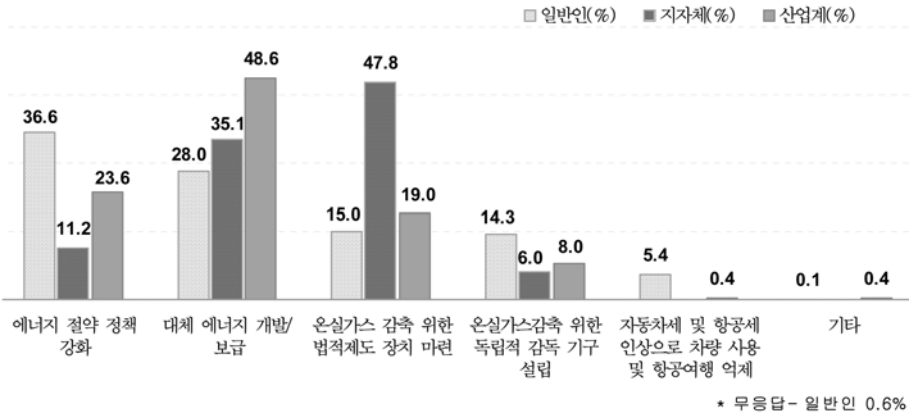
2.9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업의 역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일반국민과 지자체의 의견은 비슷한 반면, 산업계는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음.

"신·재생에너지 개발" : 산업계(42.2%)
"이산화탄소 배출량 공개 및 감축 프로그램 실시" : 지자체(38.1%) > 일반국민(32.8%)

2.10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핵심 주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핵심 주체는 개



* 무응답- 일반인 0.6%

인은 ‘개인’, 지자체와 기업에는 ‘정부’가 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정부” : 지자체(62.7%) > 산업계(54.6%)

“개인” : 일반국민(46.8%)

2.11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지자체 및 기업의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자금’을 우선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자금” : 지자체(50.0%) > 산업계(11.4%)

2.12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기업의 대응을 위한 정부의 우선 지원정책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1순위 기준)를 살펴보면, ‘경제문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종합 8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환경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3.9%(종합 6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2.13 중앙부처와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 정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와 해당 자치단체 간의 의사소통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원활하다’는 경우는 24.6%로 조사됨.

2.14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정책적 조치에 대한 인지도

산업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조치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에너지 효율 증대’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탄소세 도입’(26.2%)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조사결과 시사점 및 활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정책개발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지자체 및 산업계의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재정적 지원(50.0% 응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각 주체들, 특히 산업계에 대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등 국제적 대처 노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